

# 시내버스 이용 불편 주는 행위 강력단속

전주시가 버스 타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일부 시내버스의 승차거부, 결행, 무정차, 조기·지연출발, 과속, 신호위반, 불친절 행위 등 시민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버스이용 시민의 불편신고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150명이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 위반 운전자·사업주 동시 처분 등

### 전주시, 법규 위반행위 처벌기준 강화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민모니터단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운전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을 통해 즉시단속을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그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버스회사 차원에서 안전 운행과 친절서비스 개선에 힘쓰게 만들어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시내버스의 조기 출발

이나 무정차,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점과 종점 시간만 제 공하던 버스시간표를 노선 중간에도 버스운행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간시간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중간시간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는 정시성이 확보되고 조기출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만큼 이용하는 데 한치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쉽게 근절되지 않는 시내버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이용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제보와 추천을 토대로 친절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온 모범운전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매달 친절·안전기사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강희종 자산공기업지원 1부장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받아

전주시는 지난 7일, 강희종 한국자산공사기업지원1부장에 전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강희종 부장은 2017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년여간 전주시와 상생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공을 인정받아 전주시명예시민의 영예를 얻었다.

그는 평소 소외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통해 매년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 활동은 물론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봉사 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인 전주 시정 운영 방향과 발맞춰 아동·청소년 독서 지원을 위한 따스지역아동센터 캠프 브러리를 개관해 운영 지원했다.

특히, 그는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 학교의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무상으로 4억 상당의 사육 일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시민과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에 기여했다.

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역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전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14일 화산체육관 시민행복들서 애니메이션 영화 무료 상영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정성환)은 14일 오후 8시 화산체육관 시민행복들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를 무료로 상영한다.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영상미가 돋보인다.

영화는 전체 관람가로 전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보다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원한다면 개인용 돛자리는 필수다.

치킨과 팝콘, 맥주 등의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오후 7시30분부터 하모니카 연주와 난타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 상영되는 공간인 시민행복들은 말 그대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공단은 이곳에서 그동안 시드크와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다.

정성환 이사장은 "화산체육관 야외 유희공간에서 좋은 영화를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시청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가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내기로 했다.

전주시는 11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바라는 기업 규제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과 현장에 산재해 있는 규제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재현 중소벤처기업부 읍무즈민지원단 기획조정팀장은 "중소기업이 불편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보다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지역현실에 맞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황인홍 무주군수 '직위 유지'

### 벌금 80만원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전과를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의 형이 확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황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황 군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황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된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을 재임하면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며 허위 사실을 공

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6·13 선거공보물에 '부득이했다'고 적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하는데 차질을 주고 선거공정성을 훼손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황 군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암묵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직위상실형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황 군수는 공판 직후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다. 이제 분연의 임무로 돌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단원 상승 추행 극단 대표 항소심서 감형

전북에서 최초로 발생한 '미투(Me too)' 사건 관련, 극단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여배우와 청소년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극단 단원이 최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감독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했으며 범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된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실증모델 공모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9일까지... 교통 등 3개분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9일까지 '시민체감형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공모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무선 네트워크망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시민들이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살기 좋은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조기에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분야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관련 자유제안으로 △교통 △환경 △안전 3개 분야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신규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스마

트시티 실증모델을 확장하거나 신규 서비스 개발 과제면 응모할 수 있다.

공모는 전북 소재 ICT/SW 기업을 필수로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제안배경과 추진 시나리오, 기술개발 과제 내용 및 성과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진흥원 ICT융합사업단 SW융합팀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제출된 사업제안들에 대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사업계획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우선 협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보안과 계획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jica.or.kr)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11일 어업인 5000여명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ZZ 몰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 “어업인 생존권 위협 서해 EZZ 몰래채취단지 지정 반대”

### 군산 포함 도내 어업인들 '한목소리'

군산지역을 비롯해 전북지역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해EZZ 몰래채취단지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11일 어업인 5000여명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앞에서 서해EZZ 몰래채취단지 신규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몰래채취단지 신규지정 철회, 영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폐기, 형식적인 공청회 중단을 외치며 바다몰래채취 재개에 강력 반발했다.

주인들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서해바다몰래채취 협의체인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과 어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또 2018년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살펴보면 기초조사 부족으로 전체 22개의 광구 중 4개의 광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몰래채취가 이루어진 탓에 최대 17.4m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고 더욱이 몰래 채취가 허가구역에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됨에 따라 불법적인 몰래채취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수협 어촌계 조현철 협의회장은 "기존 몰래채취 해역의 사후 복구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한다"며 "영터리 논리를 근거로 제대로 된 저감 방안 없이 작성한 평가서와 일방적으로 추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라"고 고집했다.

이어 심명수 비응 어촌계장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몰래 채취 사업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여기 모인 어민들과 함께 우리의 바다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해수부가 함께 진행하는 바다 몰래채취단지 지정은 전라북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 전주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 도입

### 자진반납시 교통카드 지급

#### 교통사고 예방 지원조례 제정

내년부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입된다.

전주시는 최근 들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179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7건(15%)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화했다.

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고령운전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고령자 본인과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구

상이다.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인지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져 운전이 자신이 없는 어르신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전은 내만의 안전이 아닌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능력이 떨어졌다고 판단 했을 때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체 등록차량(31만 8504대) 중 70세 이상 고령자 차량은 5.31%인 1만6914대이며 전체 운전자(40만6537명) 중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4.78%인 1만946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효철 기자